

이젠 입법 전쟁... 호남 현안법안 숙원 푸나

국감 사실상 마무리... 5·18, 여순사건·한전공대 관련법 등 산적 興 지도부 지역 의원들 포진...국민의힘 '호남 구애'에 기대감 ↑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본격적인 쟁점 입법 논쟁과 예산 격돌을 준비하고 있다.

5월 관련 법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여순사건특별법 등 광주·전남 현안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지역의 미래를 쟁기게 될 내년 국비 확보 과정에서도 지역 정치권의 활약 여부에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광주·전남지역 정치인이 대거 포진해 있어 이번 국회가 '호남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기회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역사왜곡처벌법·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등을 당론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11월께 법안 추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5·18 역사왜곡을 막고 진실을 규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5월 법안 발목을 잡았던 국민의힘도 김중민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묘지를 찾아 '무릎 사죄'를 하고 광주·전남에 현역 국회의원을 '제2 지역구'로 배치하는 등 호남 달래기에 나서면서 이들 법안 처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역사왜곡처벌법의 '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은 과도하다"는 국민의힘 내부 반발도 있어 이들 법안의 일부 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19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여순사건 특별법의 21대 국회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은 '여순·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한전공대 정상개교를 위한 필수 법안인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통과도 관심사다. 그동안 고등교육법 제4조 (학교의 설립 등)에 따른 학생 당 교사(敎舍) 확보 규정에 묶여 한전공대 정상 개교에 차질을 빚었고, 이 조항을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특별 조항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에 담겨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국립대가 아닌 사립대에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국민의힘 일부의 반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의힘 정은천 국민통합위원장은 최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5월 관련 법안에 대해 당내에서도 협조할 것이며,

일부 조항에 대한 조율 과정은 거쳐야 할 것"이라면서 "이미 나주와 화순, 광주 등지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제2 지역구를 배정받았고, 앞으로 이들 의원과 (한전공대 관련) 법안 처리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예산 확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비팀을 꾸려 서울 등지에서 예산 확보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광주시는 오는 28일 서울에서 예산·정책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송갑석(서구갑) 광주시당 위원장은 "5·18 관련법안 등 지역 현안 법안 처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면서 "이낙연 당대표는 과거 전남지사를 역임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누구보다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

역의 사업과 예산에 상당히 신경을 쓸 것이며 이에 지역 의원들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출범을 비롯해 공정경제3법·노사관계법 개정, 확장 예산안 등 현안마다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하면서 일단 파국은 면했지만, 여전히 시차가 크기 때문에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경제 민주화를 위한 '공정경제3법'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원안을 유지한 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보완 장치를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3법에 대한 의지가 있지만 노동관계법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광록 기자 kroh@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맨 오른쪽)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퇴임後'에 정치권 들쭉

'국민 봉사' 발언 놓고 여 "자기 정치" vs 야 "확실한 카드"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임 후 국민 봉사' 발언을 두고 24일 정치권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퇴임 후 정계 진출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면서 여야는 선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에서는 거친 비판이 이어진 반면, 야권은 은근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총장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곧

국민을 위한 봉사"라며 윤 총장을 직격했다. 강 대변인은 "본래 공직자의 자리란 국민께 봉사하는 자리"라며 "(퇴임 후) 천천히 생각해 볼 일이다"라고 못 박았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보수언론과 야당이 유력 대권후보로 지지를 보내니 대통령도 장관도 국민도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게 분명하다"며 "검찰을 정치적 욕망을 위한 사유물로 전락시키고 있다.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을 겨냥, "'주권재민(主權在民)'이지 '주권재검(檢)'이 아니다"라며 "'칼'은 잘 들어야 한다. '칼집'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짧은 글을 적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을 적극 두둔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여권의 반응 겨냥해 "공직자가 퇴임 후에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발언에 대해, 화들짝 놀라 지레짐작 비판하고 나선 모습이야말로 소모적이고 부끄럽다"고 일갈했다. 당장 윤 총장이 명확히 거취를 밝

힌 것은 아니라고 해도, 향후 영입 추진 가능성을 타진해볼 만하다는 기대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모습이다.

한 중진은 통화에서 윤 총장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카드"라고 평가했다. 야권 잠룡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여의도 판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대단한 정치력"이라면서 "잘 모실 테니 정치판으로 오라"고 손질했다. 법사위원들 SNS도 '윤석열 대망론'으로 시끌시끌했다.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여왕벌이 나타났다"며 "야권 정치 지형의 변화는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이병훈 "문화예술인 온라인 공동 증계플랫폼 필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공연증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공동 증계플랫폼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 국회의원은 25일 "광주지역에서만 14건, 전남지역에서는 53건이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공연, 전시로 선정되어 공연될 예정이었으나 10월 현재 광주에서는 2건, 전남에서는 13건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개최했거나 예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



면-온라인 개체가 불피한 측면이 있지만, 공연예술인들의 피땀 어린 작품을 많은 분들이 감상하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휘발되고 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온라인 공연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 문화회관 연합회나 광주시, 전남도 차원에서 공동 증계플랫폼을 마련한다면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형배 "카드사 재난지원금 수익, 사회 환원해야"

카드사들의 재난지원금 수수료 수익이 19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 국회의원은 2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재난재난 지원금 지급때 사용된 카드 사용으로 카드사들이 거둔 수수료 수익이 1967억 48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신용카드를 통한 재난지원금 이용액은 14조989억원이었다. 카드종류별로는 신용카드가 7조4255억원, 체크카드가 3조4165억원,



선불카드가 4조 1470억원이 이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수익이외에 세대주 수익이외에 세대주 등 각종 정보도 획득하는 부가적 이익도 얻었다. 민형배 의원은 "재난지원금의 지급 목적에 걸맞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카드사들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해수부 13개 기관, 국민 신뢰도 낮아"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소관 13개 기관의 정령도 평가 중 일반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정령도 평가등급이 낮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은 2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해양수산부 소관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정령도 측정 결과' 종합정령도에서는 2019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1등급,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경찰청, 한국수자원공단, 해양수산부 4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외부정령도에서는



2019년 1등급 기관은 없고,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가 4등급, 해양경찰청이 5등급으로 평가 받았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수산부 산하 모든 기관이 부정·부패 없는 기관으로 성장해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며 "국정감사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책을 마련해 개선하는 것도 국민 신뢰를 찾는 방법의 하나"고 강조했다.

윤재갑 "산불 위험지역, 내화수종 심어 방어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은 25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갈수록 대형화하는 산불을 대비하기 위해 내화수종을 식재해 방어지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실된 나무는 228만 본으로 최근 3년 간 소실된 양에 비해 대폭 늘었다. 기후, 등산객 확대 등으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하는 가운데 특히 포함 등 동해안 지역은 대부분 소나무 단순림으로 구성돼 있어 더욱 취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산림청은 여전히 내화력이



약한 침엽수 위주로 식재하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내화수종을 식재해 방어지대를 구축하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해안 지역에 상록활엽수와 낙엽활엽수 등을 섞어 심어 대형 산불을 방지할 수 있는 내화수림대를 조성하는 한편, 산불 방지 연구 예산을 대폭 늘려 산불 방지 R&D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리조트	설악, 흥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 1개	2,530	1,780	리솜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실버(24)방1	2,850	1,680
	스위트형 방 2개	3,600	2,680	덕산 스피러스		골드(28)방2	3,210	1,980	
한화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천,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 (방 2개)	2,480	1,680	퀵스틴리조트	제주 퍼스픽	로얄(34)방3	4,890	3,480
		디럭스형 무기명 (방 2개)	3,110	1,880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충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방1	1,980	980
		스위트A(26)방2	2,120	1,280		스위트B(31)방2	2,600	1,380	
					로얄(35)방3	3,200	2,20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전화 (053)951-3080

동양회원권거래소 팩스 (053)944-3080